진실화해위 '신안 민간인 집단 희생' 첫 직권조사

1955년 희생 992명 '순사자 명단' 발굴 계기…내달 9일부터 방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신안군 임자면에서 희생된 992명의 이름이 담긴 '순사자명단'이 발굴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제3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사자 명단은 당시 임자면 부면장 3명이 작성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가을부터 임자면에서 각 마을별 출장 조사를 통해 작성해 몇 차례 수정 끝에 1955년 완성됐다.

이 명부는 6.25 참변 당시 북한군의 좌익이념 세력들의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순사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비를 건립하고자 당시 임자면사무소가 마을별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것으로 총 992명의 희생자 이름이 담겨있다.

이후 1955년 임자면사무소 내에 추모탑이 세워졌고, 1974년 추모탑 부지에 위령탑도 건립됐다. 2019년 6월에는 임자초등학교 인근에 충혼탑이 조성됐다.

충혼탑 뒷면에도 992명의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진실화해위는 1기 때 충혼탑과 순사자명단의 존재를 확인했고, 2기에 이르러서 임자면사무소에 보관돼 있던 순사자명단을 확보해 직권조사로 진실규명 필요성을 결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안군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1948~1951년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도, 임자도, 자은도 등 신안군 내 8개 섬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357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1기 진실화해위는 신안군의 민간인 희생 사건과 관련 총 33건을 신청받아 조사했다.

1기 조사결과 1948년 6월 서북청년단이 좌익 혐의자 검거활동을 하면서 신안군 임자면 민가에 들어가 주민을 구타하고 이에 항의하던 가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1950년 10월 이후에는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주민들을 연행해 구금했다가 해상 또는 마을 앞 등지에서 살해해 수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 임자면사무소에 보관중인 순사자 명단. 〈진실화해위 제공〉

1950년 8~10월 사이에는 지도읍, 비금면, 압해면, 임자면, 자은면 등 5개 읍·면에서 인민군이 퇴각을 하면서 대한청년단 등 우익활동을 했거나, 이장을 역임한 사람, 경찰, 형무소 간수 등 공무원의 가족 등을 희생한 것도 조사됐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신안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적대세력 사건, 부역혐의 사건 등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희생 규모는, 진술조사와 자료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1600명 이상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규모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진실화해위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관들이 신안 섬으로 직접 찾아가 희생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추가조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중대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차·헬기로 5·18 진압하라"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사망

황영시(96) 전 감사원장이 지난 23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씨는 5·18 당시 육군참모 차장으로 광주 시민들을 향해 '전차와 무장 헬리콥터를 사용해서라도 신속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문제적 인물이다.

황씨가 사망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직접 만나 조사하겠다고 통지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전두환 5·18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가운데 3명이 숨졌다.

1926년 경북 영주 출생인 황씨는 육군 제1군단장으로 전두환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5월 광주 유혈진압에 앞장선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두 차례 감사원장을 지냈다.

1980년 5·18 당시 김기석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로부터 "5월 20일부터 26일 사이 전차 발포와 무장 헬기에 의한 기총 소사를 포함한 진압작전 지시를 받았다"고 1996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1997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2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공공의료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시장 후보, 광주 의료원 설립 제1공약으로 올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후보자들에게 광주 의료원 설립을 제1공약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거나 설립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곳은 광주과 울산뿐이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은 복합쇼핑몰과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에 밀려나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린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광주시장 후보들은 광주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추진계획과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광주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정책을 제안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쓰비시重 징용 배상 시간 끌기 '통탄'

자산매각 명령 불복 재항고…피해자 2명 밖에 남지 않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잇따라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항고·재항고를 거듭해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끌고 가는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27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6일 양금덕 할머니의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 의해 항고가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5일 김성주 할머니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도 재항고장을 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채권액은 각각 2억 973만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배상이 늦어지자 원고 4명(양금덕·김성주·박해옥·이동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 중 6건(상표권 2건·특허권 4건)은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 압류를 확정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으로부터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명령)을 받았다.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 명령에도 건건이 항고하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자산 강제 매각 절차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됐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마저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이 사건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두 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당한 채권확보 절차인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모든 단계마다 항고, 재항고를 거듭하며 사건을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끌고 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